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관련 기사 4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2~3면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의 교훈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7면

새 극우의 등장으로
판세 흔들리는
프랑스 대선

8면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9면

턱없이 부족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면

노동자 투쟁

SPC 화물 노동자 12면
김포 CJ대한통운 11면
대학 한국어 강사 11면
플랫폼 노동자 10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김문성

이 글은 10월 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상황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

“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친기업 기조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이재용 사면, 민주노총 탄압 등으로 자본가들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SPC 화물 노동자들의 저항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도 그냥 굴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값 급상승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장담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둘째, 우파가 세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대표 인물들이 실통한 대안으로 비쳐지고 있지 않아,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불안정하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를 세우고 윤석열을 영입했다. 하지만 부패와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여전히 크고,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할 구심력도 부족하다.

셋째, 우파와 중도파의 이러한 혼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당들(정의당, 진보당 등)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어 내려던 노선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넷째, 그럼에도 대중의 변화 염원은 지속되고 있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아니다. 비록 산발적이긴 해도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류와는 다소 다른 이재명의 기반과 실천

대중의 변화 염원이 큰데도 정의당 등 좌파 정당이 그 염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듯하자 민주당의 좌파 정치인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재명 정치의 무엇이 변화 염원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걸까?

기반과 실천에서 문재인과의 차이, 개혁가로서의 추진력과 그 이미지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결국 축소되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당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듯했다. 이처럼 이재명은 문재인과 친문 일색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금 달라 보인다.

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단순히 민주당 기반에 얹힌 인물은 아니다. 이 점이 우파는 물론이고 현 여권 핵심부가 그를 깔고러워하며 공직에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다. 특히, 우파는 이재명의 부상이 행여라도 고통 전가에 항의하는 대중의 사기를 올릴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에서 경쟁했고, 경쟁 패배 후 그에게 소송을 걸어 지사직 박탈을 압박했던 전해철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을 총지휘하는)이다.

친문 일부는 이낙연과 손잡고 이재명 후보 확정에 불복할 태세마저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집권당이 대중의 저항을 달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 몇 차례 집권했다. 1998년 이후 5번의 정권에서 3번을 집권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지배계급 정당으로 점차 변모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의 기반은 민주당 주류의 기반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은 그 기반과 실천 등을 볼 때 민주당 주류와는 구별되는 모종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관료)들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계층 속에서 작지 않은 기반을 갖고 있다.

성남시장 전부터 그는 지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연계한 개혁주의자였고,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야권 단일화로 성남시장이 돼, 이후 시정에서 그 지역 노동조합 간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금 그는 김영호·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 이홍우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적잖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밀착 지지를 받는다. 김영호와



사회민주주의의 기반과 실천이 다소 다른 점 때문에 여권 핵심부도 우파와 함께 그를 공직에서 제거하려 해 왔다

이홍우는 정의당 고위 간부였다.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의 전직 관료들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지난 9월 <매일노동뉴스>는 친노동 지식인들이 이재명 캠프로 몰려가, 다른 후보들이 노동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급진좌파가 이끌던 기본소득 운동 조직들과 그 지식인들, 활동가들이 이재명의 측근이 됐다.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따른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최초로 광역단위 지역 노정교섭을 벌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의료·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 연설에서는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했다. “불공정 일소”, “불로소득 환수”, “보편 복지국가”, “기득권 저항의 돌파” 등도 강조했다.

이런 점들을 봐도 그는 민주당보다는 정의당 정치인들과 좀 더 비슷해 보인다.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최초의 사회민주주의자 대통령, 노동자 출신 대통령 그리고 복지 확대, 친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이유다.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는 이유도 그의 당선이 부분적으로 집권세력 교체로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을 볼 때 단지 민주당 정치인으로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이다.

무소속이었던 버니 샌더스는 미국 민주당 경선에 두 번 연속 참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이 돼 의정 활동을 한다. 그 둘은 바이든 정부에 비판적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회민주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반과 실천이 민주당 주류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친노동이자 친기업이라는 모순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로 이재명을 규정하는 것이 대선 국면에서 그를 그저 무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자유주의자들에 맞서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을 지지하지만, (강령과 조직, 실천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럼으로써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려고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계급 간 모순을 조화시키려 애쓴다. 친노동 개혁을 기업들과 화목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려 한다.

노-자 간 힘의 균형

이재명의 대선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이 대표 사례다.

여기서 ‘공정 성장’은 “역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과 경제 성장(자본 축적)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자신의 말을 인용해 보자.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성장 정책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양극화 완화 자체가 곧 성장 전략이다. ... **포용 성장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의 균형이 이뤄지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것)

그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이렇게 답했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친노동이지만 친기업이기도 하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박근혜 정

부 말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했던 말과 다소 흡사하다. “정의당이 친노동은 분명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

이재명은 경기 지사가 돼서는 (2018년 7월) 좀 더 온건하게 보이고자, 반기업·반시장 탈피 노력을 조금씩 병행해 왔다. 기업 지원을 약속해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경기도 용인시)에서 이기고 신세계 그룹의 경기도 화성시 테마파크 유치에도 성공했다.

올해 5월에는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친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7월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는 없다”며 이재용 사면에 사실상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대장동 건에서도 이런 종류의 (온건) 개혁주의자의 길이** 엿보인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순수 민간 개발 압력을 극복하고 민관 개발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을 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사업으로 민간 투기꾼들과 재벌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절반쯤 타협한 정치 노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파가 이재명 설계설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비방과 중상이다. 유동규가 한때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것만으로 이재명 몸통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주장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2018년에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집회에 참석해 노조 지지 발언을 한 데 대한 보

▶ 3면으로 이어짐



이재명은 실용적 개혁가로서의 강한 추진력 이미지를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독립적인 좌파 정치와 투쟁의 필요성

지난 5년 동안 온건 좌파의 문재인 협력 노선을 결산 정리해 보자.

첫째, 개혁을 얻어 내는 데 실패했고 개혁 배신을 막지도 못했다.

둘째, 위기 때마다 우파의 귀환을 막겠다며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가 민주당과 한편으로 비쳐져, 우파가 득을 봤다.

셋째, 위로부터 제공되는 개혁을 중시할수록 상식과 여론, 당선 가능성 같은 가치가 중시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자체 행동과 좌파는 주변화되는 것이다.

전면적이고 비교적 지속적인 계급투쟁이 없으니 변화 염원 대중이 결집할 초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유력한 대안이 제공되지 않으니 당선 가능한 민주당 좌파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지금 와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해 말로 하는 비판을 늘린다고 해서 대선 구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상징적 하루 파업으로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하다.)

계급 세력 균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좌파 정당들의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현실이 대선에 대한 노동계의 단일 대응 노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듯하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대선공동대응기구는 대선 공동대응이라면 마땅히 포함돼야 할 '후보 단일화'를 목표로 포함시키지도 못했다.

노동자·민중 경선 제안 연서명이 벌어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의당과 진보당부터 단일화에 별 열의가 없고 각자의 목표도 다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혀 응집력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노당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던 시절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경선(단일후보)파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독자 출마할 공산도 크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의 응집력 없음과 좌파 정당들의 각개약진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을 일부가 민주노총 지도위원 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들 캠프에 참여해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패한 길을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 정치인에 맞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인 이재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조직과 정치를 전제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래야 한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돼야 한다.

만약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다면, 그 이유는 변화를 염원해 그를 지지하는 노동계급 대중과 연대하고 소통함으로써, 장차 함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이런 전술로서의 비판적 투표와, 대선 캠프에 참여해 강령적이고 전략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결론으로, 지속되는 위기 시기에 위로부터는 실질적 개혁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위기와 재앙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려는 정치와 만나야 한다.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 좌파 정당의 존재감 미약에도 대중의 변화 염원이 지속되는 것은 산발적이긴 해도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 왔기 때문이다. 6월 택배노조 파업 집회

온건 좌파의 문재인 협력 노선이 남긴 후과

▶ 2면에서 이어짐

복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허위사실이었다.

우파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이나 불로소득 억제·환수 시도,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등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비난해 왔고, 지금도 시장에 맡기는 민간 공급 확대(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반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우파가 유독 이 건에서만 공공성 불충분을 부패의 증거라고 핏대 세우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다.

계급 협력

아무튼 이재명은 민주당 주류와 기반이 다소 다른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아래서 자기 당의 눈치를 많이 봤다.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이재명은 거듭 후퇴했다. 노동계급에 손해를 입히는 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수용했고(오히려 박원순은 거부했음), 조국과 윤미향 건에도 침묵하거나 때로 변호했다. 경기도 콜센터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후퇴했다.

이런 일들은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개혁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경제나 안보 상태를 보면, 계급 협력식으로 개혁을 이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이런 조건의 한국 자본주의를 국가의 수장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처지일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집권해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대 계급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다가 모순을 겪고, 결국은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방향으로 노동계급을 배신하는 것이 지난 100년간 사회민주주의의 거듭된 운명이었다.

설사 이재명이 개혁을 만만찮게 실행하려 한다 해도 진정한 권력자들인 대기업 소유자·경영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장동 의혹 공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보다 훨씬 더한 공격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노동운동과 좌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파 정치인에 대한 무비판적 기대가 아니라 독립적인 좌파적 정치와 투쟁이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노동운

동이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 '촛불 동맹'으로 규정하고 본질적으로 협력 노선(포퓰리즘 전략)을 유지해 온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조국 사태

이것은 정의당 뿐 아니라 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에도 해당한다. 입장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투쟁 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 퇴적물이 지금 좌파 정당들을 부양시키는 힘이 됐을 것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집권 초, 박근혜 탄핵에 동의한 세력들의 "개혁입법 연대"를 주장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사이버 개혁에 지지를 제공했다. 김동연·홍남기 비난하며 장하성·김상조 편들기, 윤석열 비난하며 조국 편들기 등도 그런 사례다.

문재인 첫째 딸에 당선된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위기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다. 계급 세력 균형상 양보를 강요당할 게 뻔한데다 합의를 사실상 전제로 상정한 채 말이다. 정부가 노동개악을 하려고 했을 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

으로 삼았을 때가 그런 사례였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잠정 합의를 했다가 김명환 집행부는 중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민주노총 간부들도 모두 처음에는 코로나 대응 사회적 대화 추진을 지지했다.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은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온건 좌파 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얻어 내려고 민주당의 사이버 개혁, 부패와 위선을 변호하는 잘못을 범했다. 요즘 대장동 건에서 정의당은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 본인들이 찬성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을 한 검찰을 놔두고 말이다.

여러 급진 좌파들도 조국 사태(계급 불평등과 위선, 비도덕성을 밝히 드러낸)나 윤미향 사태에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하다는 식으로 둔탁함과 무력함을 보여 줬다.

사이비 개혁인 공수처의 1호 수사, 기소 요구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문제인 것을 보면,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인정하거나 묵인한 것은 심각한 과오였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동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이정원

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무기가 아니라 대중의 필요(공공서비스와 복지 확충)를 우선하라는 목소리는 대중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당한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빌미로 10월 20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려 한다. 이미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고했고, 앞으로 신고되는 집회도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집회 불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집회 금지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업의 이윤 활동에는 이런 방역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지만, 대규모 일터와 구내식당, 백화점과 대형 마트, 버스·지하철은 예전과 거의 다름없이 운영됐다.

따라서 정부가 방역 위험을 내세우며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일터에서 집단 감염이 줄을 이어도 사용자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와 위원장을 구속했다.

투쟁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상담원, 택배 노동자, SPC화물 노동자는 감염병을 퍼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 생활이 팍팍해지고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지원 위주 정책들을 추진했고 노동자·서민 지원에는 인색했다.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였고,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고용을 점차 줄여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늬만 살짝 바뀐 비정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 결국 민간기업들의 정규직화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민간기업들도 자화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을 면피하는 길을 열어 줬다.

심지어 정부는 알량한 지원조차 점차 줄이는 실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김민아 기자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운동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줬다

까다롭게 만드는 등 정부 재정 투입을 줄이려 하고 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으로 더 후퇴했고, 안전 조치 미비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것만 해도, 청년노동자가 고층 아파트를 청소하다 떨어져 죽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하고, 고교실습생이 실습 중 바다에 빠져 죽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올해만 벌써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배신과 기만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환멸과 분노가 커진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개혁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경제 회복의 걸림돌 취급하는 것에 쓰라린 감정을 느낀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후퇴한 조건이나 지연된 처우 개선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광범한 불만

6~7월에는 광범한 지지 여론 속에 택배 파업이 기세 좋게 벌어졌고, 불허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수천 명이 집결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운동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민주노총에 방역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 기층 노동자들의 광범한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가령 SPC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과 대체수송저지 행동에 나서, 정부의 거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사용자 언론들에게 맹공격을 받은 택배 노동자들도 다시 저항에 나섰다. 부산과 김포 등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부분 배송 거부 행동을 하고 있고, 이는 CJ대한통운 전체 노동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이렇다 할 반격을 보여 주지 못했다. 다행히도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맞서 반격할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10월 20일 파업에 되도록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격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건설,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 주축 대열로 예상되는데,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도 더 많은 산하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도록 예싸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과 SPC 화물과 같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의 투쟁을 암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반격의 발판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은 지금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암호하고 그에 연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완강한 태도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SPC 화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신민영 기자

9월 2일 문재인 정부는 3000명의 경찰을 투입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했다

고, 택배,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루 파업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

사실 하루 파업으로 정부의 탄압을 저지하거나, 파업 요구들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한 부문에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것조차 그 파급 효과를 걱정하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열심이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하루 파업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주노총 중앙은 이번 파업으로 대선 노동 의제를 부각시키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친노동 정책이 반영되도록 압박하려 한다. 이는 노동자 투쟁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문재인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

존중'을 부각한 것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한 구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변화 열망이 큰 대부분 노동자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실천에서 차이가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 기반과 실천이 민주당 주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는 민주당 주류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돌아봐도, 민주당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은 개혁 성취는커녕 정부의 배신을 막지 못했다.

관건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차기 정부에 맞선 저항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다.

그러려면 10월 20일 이후에도 각 부문에서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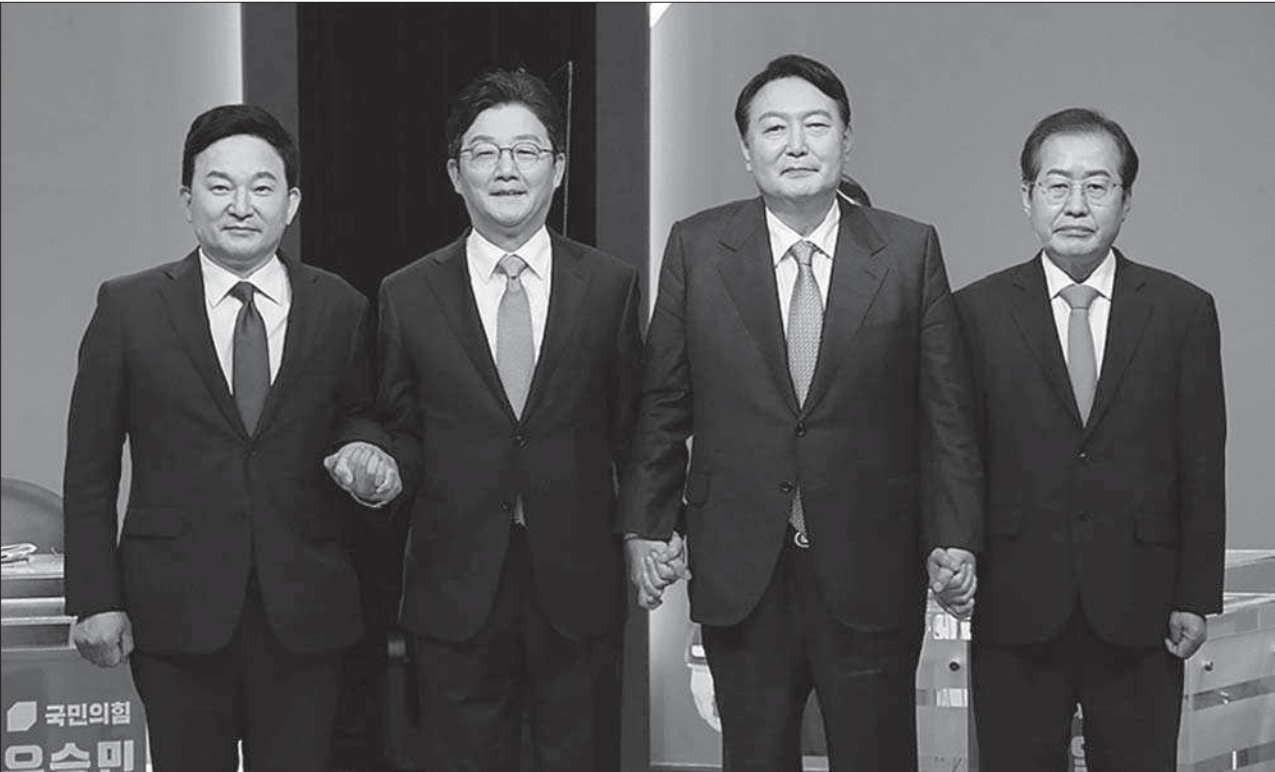


사진 출처: 국민의힘

새로운 것 하나 없는 '그놈이 그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진개진

김승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예비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인으로 좁혀졌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윤석열

지지를 1위인 윤석열은 중도로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입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입당을 전후해 쪼그라들었다. 전통 우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친시장·반노동 본색이 급세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개발 활성화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로 부자들의 돈벌이를 도와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지나친 고용 보호”와 강성 노동조합을 공격해서 기업을 도와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윤석열의 신조다. 안보 문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확고하게 강조하는 등 전통적 우파와 별 차이가 없다. 유사시에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미국 측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바로 밝힌 데다, 홍준표와는 차별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하고 물러섰을 뿐이다. 윤석열은 검사 시절 몇몇 특권층(조국 포함) 부패 수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결국 ‘부패원조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보여 주듯이 반부패에도 별로 진지한 인물이 못 된다. 그의 대선 캠프는 친박계가 주를 이룬다.

꼰돌 우파 홍준표

지지를 2위 홍준표는 선명한 우파성을 내세우며 세를 결집하려 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우파가 위기일 때 당을 지켰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홍준표는 2017년 대선에서 만신창이가 된 친박 정당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후보로 출마했다. 그때도 재벌 지원, 노동조합 때려잡기, 독자적 핵무장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역대 최대 표차로 2위를 했다. 이번에는 안보 문제를 우파 결집의 고리로 삼으려 한다. 2차 경선 이후 광주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앞세운 것은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였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3년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대표적인 악행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발맞춘 작태였다. 홍준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착한 적자’를 옹호해 문제 삼았다. 적반하장으로 공공병원 적자가 다 강성 노동조합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지금 코로나 대응에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 그는 ‘홍카콜라’ 운운하지만, 돼지발정제 논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모욕 등에서 보듯이 그저 역겨운 ‘아재 막말러’에 불과하다.

별 볼 일 없는 ‘개혁보수’ 이미지

3, 4위인 유승민과 원희룡은 합리적 보수를 자처해 온 인물들이다. 그러나 유승민은 한때 스스로를 ‘원조친박’으로 내세웠다. 2015년 원내대표 시절에는 사드 배치, 민영화 촉진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을 당론으로 강행했다. 이런 개악들이 누적돼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탄핵을 찬성하며 탈당했고, 안철수와 합당했다.

그래서 우파 지지자들한테서 여전히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지난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으면서도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간 것을 보면 그의 우파 본색도 만만찮다. 유승민은 확고한 신자유주의자이고 강경 안보주의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 징병제 실시 등 성별 이간질을 부추기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페미니즘’이 거짓말로 드러나 생긴 환멸을 이용하는 한편, 페미니즘을 공격해 진보 진영의 위신을 실추시키려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학생운동 출신이고, 검사를 거쳐 2000년 총선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3선을 하고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됐다. 제주도지사 시절 그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설립을 강행하려다가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절했다. 2018년 제주도지사 연임에 도전하면서 당시 반우파 바람이 불자 슬쩍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한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장 개혁파로 여겨졌는데, 이 개혁 이미지는 꼰돌 우파들이 가득한 당에서 얼마 없는 운동권 출신이라 생긴 것에 불과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전두환에게 세배하러 가서 큰절을 올린 게 화제가 됐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명박계로 불렸다.

4인은 11월 4일까지 경선을 벌인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우파적 방향성에 비하면 사소하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다. 이들 모두 민주당의 개혁 배신이 낳은 환멸을 우파적·반동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려 한다. 그것이 성공해 친기업 정책들로써 착취를 강화하고 고용·복지를 삭감하는 경제 위기 대응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이원웅

지난 9월 말에 열린 독일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16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민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패배는 독일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 기간에도 두드러졌다. 사회안전망, 환경/기후 변화, 경제/일자리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투표 직전(9월 24일)에는 국제 기후 행동의 일부로서 베를린에서 10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인 인프라테스트 디마프의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40퍼센트가 “근본적 변화”를 바란다고 답했다. 2017년 총선 때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갑절로 늘어난 수치다. 당시 그렇게 답한 사람은 주로 좌파당과 녹색당 그리고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독일 총선의 또 다른 패배자는 바로 좌파당이었다. 좌파당은 지난 총선보다 200만 표 이상을 잃고, 득표율이 거의 반토막 났다. 정당 투표 득표율은 4.9퍼센트에 그쳐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요건인 5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자 세 명을 낸 덕분에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재앙은 가까스로 피했다.(독일 선거법은 지역구 당선자가 세 명 이상이면 5퍼센트 득표 요건에 미달해도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대중의 변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좌파당은 어쩌다 이런 패배를 겪게 됐을까? 여기에는 분명,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막으려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민당과 녹색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장점 활용 실패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좌파당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 지도부는 좌파당을 사민당과 녹색당의 잠재적 연정 파트너로 드러내는 데 강조점을 뒀다. 그러면서 사민당과 녹색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그들을 달래려 했다.

예컨대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슐츠가 “독일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면 미국과의 협력과 … 나토(NATO)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좌파당 총리 후보 디트마어 바르치는 나토 반대라는 좌파당의 당론을 내세우기보다는 “나토 문제가 연정의 장애물이 될 이유는 없다”며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 나아가, “평화 유지” 임무라면 독일군 파병을 지지할 수 있다고도 해, 모든 파병에 반대한다는 좌파당의 애



독일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에도 좌파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9월 24일 10만 명이 참가한 베를린 국제 기후 행동

초 공약에서 후퇴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이나 부유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왼쪽 꺾박이를 쳤다. 그러나 좌파당은 슐츠와 그의 사민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온 것을 비판하지 않았고, 녹색당의 불철저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군비 증강 지지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좌파당은 사민당·녹색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던 자유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호등 색깔 연정[녹색당-자유민주당-사민당의 연정]은 결국 유권자를 속이는 가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연정에는 좌파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좌파당의 지도적 인물들이 내놓은 핵심 메시지였다.

사실, 선거의 핵심 쟁점들인 기후 변화와 경제/일자리 문제 등은 좌파당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쟁점들이었다. 예컨대, 기후 결석시위 청소년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모든 정당들 중에서 좌파당의 기후 공약이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연정 파트너로서 자신을 어필하는 선거 전략에 매달린 탓에 그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집권 보수 정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였다. 퇴임하는 총리 앙겔라 메르켈

그러면서 많은 표가 좌파당에서 빠져나갔다. 인프라테스트 디마프의 추산에 따르면, 좌파당이 잃은 200만 표 중 절반 이상은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갔다(각각 59만 표와 47만 표). 기존 좌파당 투표자 중 85만 명 이상은 기권하거나 더 급진적인 듯한 군소 정당에 투표했다.

지방정부 참여

좌파당 지도부의 이런 선거 전략은 총선 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좌파당은 여러 지방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해 왔다. 베를린에서는 좌파당 창당 주역 중 하나인 민주사회당(PDS, 옛 동독 공산당의 후신)이 2002년부터(좌파당은 2007년에 공식 출범했다) 2011년까지 사민당과의 ‘적적’ 연정에 참여했고, 2020년부터는 적적녹(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연정에 참여해 왔다.

지방정부 참여는 언제나 자신의 강령이나 당론과 모순을 빚는 결과를 낳았다.

베를린 적적 연정은 집권 이듬해인 2003년부터 공공부문 긴축을 단행했다. 그해 베를린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을 최대 12퍼센트까지 삭감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4분의 1 가까이 줄였다.

이런 조처들은 ‘운신의 폭’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됐다.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운동이나 노동조합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좌파적 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 베를린에서는 사민당이 과거에 수도 사업 민영화로 나아가는 계약을 비밀스럽게 추진한 것이 드러나, 수도 민영화 반대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통일 후 주변화된 민주사회당이 성공적인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통일 직후 동독 지역에서 시행된 민영화와 긴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좌파당 평당원들은 이 주민투표를 기층에서 조직했지만, 사민당과의 연정을 의식한 좌파당 지도부는 이 주민투표를 끝내 지지하지 않았다.

올해 3월 말 팬데믹이 한창인 와중에 사민당-녹색당-좌파당이 연립한 브레멘 주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좌파당 당원인 주 보건부 장관도 이를 옹호했다.

튀링겐주에서 좌파당이 참여한 연립 정부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기도 했다.

연방 수준에서 좌파당은 민영화 반대를 분명하게 표방한다. 그러나 지난해 좌파당이 참여한 베를린 정부는 지하철(S-반)을 공개 입찰에 부쳤다. 이는 민영화로 한 걸음 다가가는 조처였고, 노동조합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지방정부 참여는 앞서 좌파당의 강점으로 제시된 기후 정책과도 모순을 빚었다. 2009년에 출범한, 사민당과 좌파당의 브란덴부르크주 연립정부는 지역 석탄 산업의 기득권에 도전하지 않았다. 2019년, 좌파당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한 “좌파당의 5대 기후 보호 요구”를 발표했다. 반면, 좌파당이 참여한 브란덴부르크주

정부는 갈탄 채굴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도 탈석탄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란덴부르크의 석탄 발전소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의 하나로 꼽힌다. 브란덴부르크의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13퍼센트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기도 하다(2019년 1월 현재). 석탄 산업의 이윤을 위해 계속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곳에는 석탄 산업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일 연방 환경부는 브란덴부르크를 독일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곳의 하나로 꼽는다. 이곳은 극심한 가뭄 등으로 농지 황폐화와 사막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석탄 기업들이 황폐하게 만든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들의 이윤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석탄 산업 노동자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좌파당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 주장해 온 바, 즉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좌파당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를 흑흑 연정[보수 정당과 녹색당의 연정]에 넘겨 쥐서는 안 된다며 석탄 산업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는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좌파당 소속 주정부 장관들은 연정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석탄 기업들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좌파당의 이런 행보가 지지자나 잠재적 지지자들의 신뢰를 갉아 먹고, 다른 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실망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세력이 득을 볼 기회를 열어 줬다. 예컨대, 튀링겐주에서는 적적



투쟁을 건설했던 곳에서 좌파당은 지지를 얻었다. 도이체보넨(부동산 대기업) 물수 운동

녹 연정 하에서 극우인 AfD가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만 해도 이곳에서는 좌파당 지지율이 40퍼센트였지만, 지금은 AfD가 24퍼센트를 득표해 제1당이 됐다.

이런 실천이 자아낸 실망 때문에 좌파당의 당체는 줄거나 정체해 왔다. 물론 좌파당은 단지 선거주의 정당이 아니라 운동의 정당이기도 했다. 좌파당 당원들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운동, 기후 운동, 병원·보육원·철도·교육 부문 등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파업과 저항에 관여해 왔다. 그러면서 젊은 신입 당원들을 가입시켰다. 옛 서독 지역에서는 2017년부터 당원수가 다시 늘어나 2009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당세 감소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정체와 위기를 배경으로 좌파당 내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좌파당이 여성, 성소수자, 난민, 기후 변화 같은 ‘중간계급적’ 쟁점에 머물린 결과, 임금 문제와 같은 ‘진정한’ 계급 문제에서 멀어졌다”는 경제주의적 주장이 오른쪽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것이 자아낸 당내 논쟁은 그런 쟁점들과 노동계급의 경제적 문제 모두에서 좌파당의 신뢰를 갉아먹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쟁점들을 노동계급의 투쟁과 대립시키는 관점은 옳지 않다. 그 쟁점들이 노동계급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민자 배경인 상황에서 이민자 차별 문제를 노동계급과 분리시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좌파당의 경험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은 선거를 통한 정부 진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좌파에게 딜레마와 난점을 낳는다는 것이다. 좌파당의 실패는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

데모스, 영국의 제러미 코빈 등 다른 유럽의 좌파적 사회민주주의가 겪어온 어려움과 맥을 같이한다.

진정한 희망은 의회 바깥에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는 데 있다.

이번 독일 총선과 함께 진행된 베를린 주민투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베를린에서는 높아지는 임대료 탓에, 부동산 대기업을 몰수해서 공유화하자는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졌다. 좌파당은 이 주민투표를 지지한 유일한 정당이었고 좌파당 활동가들은 주민투표를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몰수 지지가 평균 이상이었던 곳에서는 모두 좌파당 득표가 늘었다. 좌파당이 선거적 재앙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한 지역구 당선자의 하나도 이런 지역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일정한 구실을 한 곳에서는 좌파당이 득을 봤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이어, 독일 사민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중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러나 사민당의 득표는 25.7퍼센트에 불과하다. 부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성적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번 선거의 승자로 부상해 유럽 정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사민당이 얼마 전에만 해도 AfD(독일을 위한 대안)에도 밀릴 만큼 빈사 상태였던 걸 생각하면, 정치 양극화가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경제적·정치적·생태적 위기 속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대중의 변화 염원과 자본의 필요 모두를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사민당의 처지는 불안정할 것이고, 왼쪽에서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고 여러 투쟁들을 체제에 맞선 하나의 투쟁으로 연결하는 혁명적 정치가 필수적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소비자들, 산업들이 허리띠를 급격히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계적이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빨리 늘었다. 그러는 동안 우월한 지난겨울과 실망스러운 올여름 사이에 비축분이 고갈됐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10년 새 50퍼센트 늘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석탄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심스런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이었다. 석탄 발전소는 중국 전력의 70퍼센트를 생산한다.

유럽이 특히 취약한 것은 수입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는 영국 역시 수입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에 더한층 취약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알파빌’ 칼럼은 이렇게 설명한다. “규제 완화는 에너지 도매가 대비 소매가를 끌어내렸다.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 6대 업체에서 최대 70개 조직으로 영국 에너지 시장 경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러 새 공급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기꺼이 경쟁자보다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비용 이하의 가격을 제시했다. 또, 많은 기업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기업이었는데 이 역시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했다. 다른 기업들은 시장에서 비롯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선물 계약과 같은] 장치들을 경험 많은 업체들보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다 더 거추장스러워 했다.”

많은 에너지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어 비축분을 쌓고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보다는 천연가스 현물 시장에 의존했다.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가 성사될 때의 시가로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그런데 이 시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영국 에너지 회사들이 줄도산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몇 년 전부터 천연가스를 현물 시장에서 구매하기 시작했다.

시장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약화된 반면,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인 러시아는 더 유리해졌다. 10월 6일에 천연가스 가격은 시소를 타는 듯했다. 처음에는 급격히 오르더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의 가스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자 도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여분이 실제로 있다 해도, 대가가 따를 것이다.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럽연합에게 러시아를 “적성국”으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러시아 관계자는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서방으로 보내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속히 승인하면 러

시아산 천연가스가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신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10년 가까이 저장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승인하면 러시아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연합을 달래려고 반대를 거둬들였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자라 지금의 에너지난에 덜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절로 뛰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칼럼니스트 로버트 암스트롱은 2010년대 중반부터 화석연료 추출에 대한 자본 투자가 하락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 그러나 탈탄소화는 공급 쪽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머지 다른 쪽의 이야기는 에너지 기업(특히 미국 에너지 기업) 경영진이 주주들의 말을 따르는데, 주주들은 투자를 회수하려 하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투자자들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벌어들인 돈을 챙겨 가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취한 보잘것없는 조처는 화석연료 투자 감소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난은 이런 조처마저 역행시킬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석탄 업자들에게 생산량을 늘리고 탄광 신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전에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던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승인하기도 했다. 화석연료 자본주의는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6호 / 번역 오수민



탈탄소화 노력은 맹목적 시장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발목 잡힐 것이다

새 극우의 등장으로 판세 흔들리는 프랑스 대선

찰리 킴버

프랑스에서 새 극우가 등장해, 내년 치러질 대선판이 뒤흔들리고 있다.

인종차별적이고 이슬람을 혐오하는 에릭 제무르가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을 앞질렀다.

10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무르의 지지율은 17퍼센트로, 지지율 15퍼센트인 르펜을 앞선다.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여전히 25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르펜과 제무르의 지지율을 더하면 마크롱을 훌쩍 앞선다.

이 결과가 내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제무르가 마크롱을 상대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마크롱은 당연히도 광범한 반감을 사고 있다. 마크롱이 노동자를 거듭 공격하고, 노란 조끼 운동을 탄압하고, 대중을 멸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이슬람 혐오,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여성 차별, 성소수자 차별을 지독하게 뒤섞어 내세우고 있다. 많은 면에서 마크롱의 견해는 르펜보다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이다.

제무르는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으로 몇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파시스트들이 퍼뜨리는 “대전환”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환”은 유럽 백인들이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무르는 무슬림을 “식민 침략자”로 묘사한 바 있고, 무함마드 같은 성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주민 200만 명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4일 제무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기다려 왔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전에 없던 이민자 물결이 프랑스를 휩쓸어 온 나라가 외국에서 온 이슬람 주의자들의 소굴이 돼 버렸다는 메시지 말이다.”

9월 30일 제무르는 보호자 없는 이주민 아동을 추방해야 한다면 이들이 모두 “도둑, 살인자, 강간범들”이라고 말했다.

제무르는 페미니즘을 비난한다. 사회가 20세기를 거치며 “남성성을 상

실”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무르는 또한 성소수자 운동이 전통적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년 단체 ‘제네라시옹 제무르’(제무르 세대) 회원들이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일련의 공격을 자행했다. 성소수자 술집과 한수도사가 습격 대상이 됐다.

제무르는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여서 득을 봤다. 언론들은 제무르가 주장을 펼 기회를 한없이 줬다. 제무르가 득세하는 것은 주류 정치에 인종차별이 침투하고, 주류 우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르펜 선거 캠프가 분열하고, 좌파가 실패한 덕이다.

마크롱은 무슬림을 억압하는 세법 제정들을 추진했고, 경찰 권력을 강

화했다. 보수 성향 대권 주자들은 모두 이를 지지했고, 이보다 더한 일을 하고자 한다.

악화

마크롱은 극우를 악화시키기는커녕 더 고무했다.

기성 우파 정당들 중 어느 곳도 결선투표에 진출할 만큼 득표하지는 못할 듯하다.

르펜도 수세에 몰려 있다. 르펜은 기성 우파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국민연합을 “해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르펜 지지층 일부는 르펜이 변절했다고 말한다.

마린 르펜의 아버지이자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은, 제무르가 [마린 르펜보다] 더 나은 후보라면 제무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다. 장-마리 르펜은 <르 몽드>지에 이렇게 말했다.

“마린은 자기 근거지를 내팽개쳤고, 이전까지 마린의 표발이었던 곳들을 에릭이 장악했다.”

“에릭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최선의 후보라면 당연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르 몽드>의 보도를 보면, 제무르는 2020년에 장-마리 르펜, 우르줄라 폰리벤트로프와 점심 식사를 했다. 우르줄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의 딸로, 현재 제무르를 지지하고 있다.

주류 우파의 일부는 르펜보다 제무르를 선호한다. 제무르는 주류 우파 출

신이고 저명한 재계 인사 몇몇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무르는 프랑스 우익 일간지 <르 피가로>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2017년 대선 때 마린 르펜에 투표한 유권자의 30퍼센트, 보수 정당 공화당의 후보 프랑수아 피용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31퍼센트가 이제 제무르를 지지한다.

르펜은 노동자 표를 얻으려 때로 반기업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제무르의 경제 정책은 법인세 인하, 노동자 연금 수령 연령 높이기, 복지 삭감 등 모호함 없이 친기업적이다.

좌파 쪽 주요 대선 후보인 장뤼크 멜랑송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1퍼센트였다. 이는 2017년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이다.

녹색당은 7퍼센트,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은 6퍼센트를 얻는 데에 그쳤다.

멜랑송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단결”을 호소했지만, 다른 정당들은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하다. 그렇게 했다가 이후 선거에서 완전히 밀려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극우와 파시스트에 맞서, 르펜과 제무르 모두에 맞선 운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급진 좌파 대부분을 포함한 좌파들은 시위와 대중 선전이 아니라 선거 책략에 몰두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5호 / 번역 강미영



사진 출처 Eric Zemmour(메이스트)

제무르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성소수자 차별주의자다

남아공 금속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찰리 킴버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노조인 남아공 금속노조(NUMSA)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두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약 15만 5000명이 10월 5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들의 행동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많은 부분이 멈출 수 있다.

파업 참가자 솔로몬 린디웨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의] 결의가 높습니다. 임금이 너무 적어요. 저는 12년 근속 숙련직인데, 한 달에 고작 8500렌드(약 68만 원)를 받습니다.

“저희 가족 중 다수가 직업이 없어서 제가 그들을 돕기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몫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집회를 하고 아무도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파업 투쟁이지, 그냥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금속노조 사무총장 어빈 짐은 “파업 기간 동안 쥐새끼들이 일터에 가도록 놔둬선 안 된다” 하고 말했다는 이유로 우익 언론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파



사진 출처 Telogo Lelie/City Press

이번 파업은 지난 7월 남아공 소요에서 드러난 가난과 저임금에 대한 더 광범한 불만과 맞닿아 있다

업 파괴자들에 대한 폭력을 사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들이야말로 폭력에 시달려 왔다.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도시 웨이드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자 대열에 자동차가 돌진해, 금속노조 조합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도시 부이센스에서는 경찰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고무탄을 발사했다.

경찰과 보안업체 요원들이 피켓라인(파업 노동자들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행동)을 공격하고 심지어 파업 노동자들에게 발포한 곳도 있었다.

지난주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수많은 파업 참가자들이 사장들에게로 행진해 노동조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이 서한에서 “흑인과 아프리카인 노동자가 늘 초착취당하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임금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사측의 의도를 규탄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특히 보수 우익 고용주 협회가 추동하는 반동적인 반노조 입장”을 규탄했다.

요구

어빈 짐은 파업 대열을 향해 이렇게 연설했다. “물러서지 마시다.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갑시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적용 첫해에 임금을 8퍼센트 일률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2퍼센트 더한 만큼 추가로 임금을 인상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약 5퍼센트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2021년에는 4.4퍼센트,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0.5퍼센트를 더한 만큼, 2023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1퍼센트를 더한 만큼이다.

금속노조 대변인 파카밀레 흘루비마졸라는, 고용주들이 2020년에는 전염병 핑계를 대며 “우리더러 현상 유지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합의하며 임금 인상 기대분을 포기했다.

마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사측은 지난해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데서 득을 봤다. 우리는 사측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 [혜택을] 돌려주리라 기대했다.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번 파업은 가난과 저임금에 대한 훨씬 더 광범한 불만과 맞닿아 있다. 그런 정서는 지난 7월 남아공을 휩쓴 소요·탈취에서도 드러났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중심에 조직 노동자들이 있다.

10월 7일 남아공 노총 코사투는, 다음달로 다가온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하루 파업·시위를 벌였다. 코사투는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도시 28곳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동에 대한 참여는 들쭉날쭉했다. 금속노조 파업이 훨씬 활력 있고 목표도 분명하다.

린디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투쟁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5호 / 번역 박혜신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임준형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인한 경우는 4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폭풍·홍수·화재·가뭄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갈수록 빈발하고 파괴적이 되고 있는 기상 현상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기후 난민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연구 결과는 그 수가 2050년에 약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물론 추정치일 뿐이지만, 기후 관련 이주와 난민이 늘고 점점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지대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겪는 곤경은 대표적인 사례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는 자국민에게 분양할 24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를 이웃 국가인 피지에서 매입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세계 육지 면적의 2퍼센트를 차지하는 저고도 해안 지대에 인구의 10퍼센트가 거주한다.

2013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옌이 필리핀의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상업 중심지 타클로반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6293명이 사망했고, 집 110만 채가 파괴돼 40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작은 저소득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 예컨대 1991년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 고리키는 적어도 13만 8000명의 사망자를 냈다. 반면 이듬해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의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를 강타했는데, 더 강한 태풍이었는데도 사망자는 65명으로 훨씬 적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 내에서도 기후 위기의 피해는 계급에 따라 다르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를 휩쓸었을 때 2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다수가 흑인이었다. 또,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고 가난할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 2세는 해당 지역이 폭풍 해일에 취약하다는 경고를 무시했고, 심지어 이라크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홍수 방지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고는 참사 후 구호물품이 오지 않아 생존자들이 상점을 침탈하자,



사진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블리커)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는 가장 크다

이들을 폭도라고 매도하며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미국이 침략한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50년 동안 가뭄이 심해져 왔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34개 주 모두 지난 30년간 적어도 한번 이상의 재난을 겪었다. 이런 곳에서 소련의 침공과 뒤이어 미국이 20년간 벌인 전쟁은 기후 변화 탓에 가뭄이나 취약해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2021년 1분기에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거의 절반인 196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2020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570만 명에 이른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타나모

각국 지배자들은 지금도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미군은 중남미에서 오는 이주민을 막으려고 부대를 창설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주둔시키고 있다. 2015년 펜타곤은 이 부대의 훈련에 대해 "일련의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서 주민이 집단 이주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 참가자들에 따르면, 바다에서 난민선을 막아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까지(고문으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억류하는 작전 훈련이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전체 체제와 지배자들의 정책 등과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악화되고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또, 기후 변화 그 자체도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후 위기를 전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이런 맥락을 보지 않은 채 기후 변화를 분쟁·집단 이주와 단순 직결시키면 이는 기후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기후 변화가 낳는 자원 부족과 재난에 대응해 평범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면, 기후 난민은 사회에 불안정을 낳는 '안보 위협'으로 비춰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지배계급 사람들이 기후 위기와 더 넓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쟁점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난의 발생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맞선 운동은 이주·난민 등 인종차별 쟁점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와 인종차별

이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예컨대 '멸종반란 영국'의 일부 창립자들은 기후 위기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가능한 한 광범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멸종반란 운동이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종과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멸종반란 운동 안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인종차별적 주장에 타협하기도 한다.

물론 멸종반란 운동에 참가하는 다수는 인종과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호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쟁점으로 멸종반란 조직이 분열되기도 했다.

기후 불평등 심화는 기후 위기를 돌

러싼 진정한 분단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화석연료 체제에 기반해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가와 각국의 지배계급은 이 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출신이 다수인 이주민과 난민의 본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런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 자신도 거주국에서 더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를 낳았다. 이주민과 난민은 대다수가 각국에서 노동계급의 중요한 일부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이윤 체제를 마비시킬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지배계급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해 노동계급과 피억압 집단들이 단결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는 것은 이런 이간질에 맞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난민 협약

기후 난민이 한국에 온다면 난민법의 매우 협소한 난민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난민법은 국제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협약은 냉전을 배경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만들어졌고,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

람만 난민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전쟁 난민이나 기후 난민은 법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적을 가진 나라 안에서 떠도는 난민(국내실향민)도 마찬가지다.

난민 규정을 확장해 기후 난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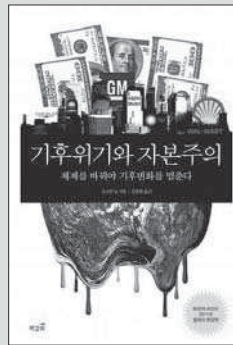
그러나 이주의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설령 난민의 정의를 확장해도 이를 입증해 난민 지위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 부유한 국가들과 유엔난민기구 역시 부담을 피하려고 난민 정의 확장을 꺼린다.

따라서 이민 통제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국경은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국민 국가가 확립되면서 등장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국적에 따라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등 지배계급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국경을 통제해 왔다.

이에 맞서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를 보장하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아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추천 책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 체제를 바꿔야 기후변화를 멈춘다
조너선 닐 지음, 김중환 옮김
책갈피, 488쪽, 20,000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선영

10월 8일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0년까지 제출해야 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들은 뒤늦게서야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안을 10월 중에 확정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이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준다고 자화자찬하기에 여념 없다.

반대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발전, 농축산 등 대부분의 기업들과 우파 언론들은 이번 안이 이윤에 타격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정한 문제

그러나 정부 안의 진정한 문제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자체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이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로 대체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2018년보다 40퍼센트 감축한다고 선전하는 것 자체가 수치를



9월 25일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

뻥튀기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은 총배출량을, 2030년은 탄소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2030년도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40퍼센트가 아닌 30퍼센트 감축 계획이다.

게다가 설사 40퍼센트 감축 계획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안한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다.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보다 45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안은 2010년

보다 23퍼센트가량만 줄이는 안이기 때문이다.(총배출량 기준)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목표이다.

게다가 기업 이윤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게끔 계획하려다 보니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은 고작 14.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꿈의 기술’들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거나 배출을 줄이겠다는 황당한 계획들이 담겨 있다.

탄소를 포집해서 바닷속에 저장하는 신기술을 통해 1000만 톤에 달하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2030년에도 핵발전으로 전기를 146테라와트시(TWh)나 생산하겠다고 한다. 2020년에 160테라와트시였던 것에 비해 보면 앞으로 거의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30년에도 석탄 발전은 전체 전기 생산의 20퍼센트가 넘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산업 부문 감축량(3800만 톤)과 비슷한 3500만 톤을, 실제 효과도 불분명할 해외 감축으로 상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수소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수소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수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하는 만큼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해외에 떠넘기겠다는 셈이다.

태생부터 친기업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한계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처럼 부족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가 올해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 때 포스코·현대차·SK처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친기업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정의당·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청소년 위원이나 종교 단체 소속 위원들은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며 중도에 사퇴했다.

여러 환경·노동·사회 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가하지 말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녹색 들러리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 적지 않은 인사들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참가했다. 결국 정부·기업의 위선에 ‘녹색 들러리’를 서 준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탄소 감축 계획에도 반발하는 기업들의 태도에서 보듯, 탄소 배출 감축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맞서는 투쟁의 전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기업과의 협의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맞서는 투쟁을 발전시키며 사회를 바꿀 진정한 동력을 키워야 한다.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이창배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지난 3월 28일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다.

대리운전, 라이더, 택시, 웹툰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5일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종사자법 추진 중단과 노동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와 방식이 약간 다를 뿐,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일한다. 회사가 정한 일방적인 근무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적

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말로만 ‘보호’를 떠들고 있다는 것을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었다. 2007년에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특고 노동자를 노동관계법 밖으로 밀어내려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법에 특고 지침을 만들어 경제법적 보호를 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유리의 원칙?

물론, 지금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법과 기존의 노동관계법 중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정소송 등으로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계약해지를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란 무엇일까?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이 되기 십상일 것이다.

지난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인가증이 나갔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약 플랫폼종사자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게 뻔하다.

그 밖에도 문제는 많다. 법안 곳곳에 합정을 파 놓고 “보호”라는 위장막을

덮어 놓았다.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공개를 막아 놓았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계약해지와(대리운전) 배차 제한 등의 부당한 계약변경을 제어하지도 못한다. 10~15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면 그만이라고 인정한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 안을 비판하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해 조건부 찬성을 하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온전한 노동자성 보장이 안 되더라도, 일단 노동조합의 권리 인정이나 공정한 계약, 사회보험 적용 등을 법안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아니면 법원이 나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중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소수인데다 근로기준법은 더 적다. 다수는 노동

기본권 테두리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법조문에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다 해도, 전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개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공간이 크다.

적잖은 사람들은 일단 아쉽더라도 순차적 개혁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 많은 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뒤에는 그것을 뜯어 고치기가 더 어렵다.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보호법 등이 보여 주는 바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자살 이후 “여론몰이도 모자라 임금 삭감까지. 못 참겠다!”

신정환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자살 이후, 한 달 넘게 비난 공세에 시달려 온 전국택배노조 소속 해당 대리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CJ대한통운 원청이 장기대리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1월 1일부터 김포 장기대리점 조합원들의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 기사가 수거하는 것) 물량을 자살한 대리점주 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모두 이관시킨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 한 달에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250만 원이나 임금이 삭감될 상황에 처했다.

노동자들은 그간 온갖 비난과 왜곡에도 할 말을 삼키며 참아 왔는데, 사측이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택배노조는 10월 1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장기대리점 한송이 조합원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한송이 씨는 “우리가 뭘 해도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라며 “제가 대표로 단식 투쟁을 결의하게 됐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저의 아이들까지 뒤로 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CJ대한통운 원청이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노조원들의 집화처마저 모두 강탈해 생존권에 위협

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송이 씨는 자살한 대리점주가 그간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데 대한 울분이 단톡에 몇 마디로 표출되었을 뿐”이라며 “지난 한 달간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당했던 진짜 ‘갑질’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그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이유로 그 분의 몇 년간의 갑질이 정당화되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심한 말 한 것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었던 소장에게 그 심한 말을 몇 년 동안 당했습니다. [소장은] 수수료를 삭감했고, 몇 년 동안 매달 수수료를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입금해, 기사들은 카드값, 공과금, 월세 밀리면 어찌나 불안해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장은] ‘싫으면 나가라. 구역 조정하겠다’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노조 창립 후 고인은 교섭도 제대로 안 나왔고 노조를 완전히 무시했기에, 그 2개월여 동안 저희는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지옥

택배노조는 지난달 CJ대한통운 원청이 자살한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포기 각서’ 제출을 압박한 정황을 폭로했

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이런 의혹은 해명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뭇을 떼어 유족을 달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집화 물량을 뺏어 가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항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CJ 원청은 여론몰이로도 모자라 저희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CJ 원청 [이 직접 거러하는] 집하처를 [유족에게] 드리면 뭘 텐데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송이 씨는 사측과 보수 언론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용감하게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동료 조합원들이 함께 집단적 항의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최근 CJ대한통운의 일부 택배 노동자들이 원청과 대리점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장기대리점 옆 김포대리점 소속의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떼 가는 대리점주에 맞서 임금 인상(대리점 수수료 인하)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부산지역 노동자들도 같은 문제로 투쟁하고 있다.

한송이 씨는 “이 모든 불리함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 제[회]의 투쟁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부당한 비난과 임금 삭감에 맞서 투쟁에 나선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단식 농성에 들어간 택배 노동자 사측은 노동자 비난도 모자라, 임금도 대폭 삭감하려 한다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연세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았다튀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현재 한국어 강사들은 고등교육법의 ‘교원’이나 강사법의 ‘강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학 당국들은 한국어 강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임금을 강요하거나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어 강사들은 자신들의 분명한 법적 지위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어 강사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학 당국과 정부를 비판했다.

최혜영 강원대 조합원은 한국어 강사들을 불안정한 처지로 내모는 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모든 강원대 한국어 강사가 2년 이상 근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매학기 재채용에 응하며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어야 했고,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는 계약서에 서명을 종용받았습니다.

“대학 당국은 한국어 강사들에게 적은 시수의 강의를 주고, 수많은 강의 외 업무를 시키며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로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대학들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한국어 강사를 쓰고 버립니다.”

초단기 근로자

심지어 강원대 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재채용을 명목으로 한국어 강사들을 수차례 해고했다. 해고된 강사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런

데도 강원대 당국은 대법원에 항고하며 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

이창용 서울대 조합원도 한국어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주당 강의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여학당이 전체 172개 여학당 가운데 65퍼센트,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어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수근 연세대 한국어학당 지부장은 한국어 강사들의 등골을 빼먹는 연세대 당국을 비판했다. 최근 연세대 한국어 강사들은 저임금과 공짜 노동을 강요해 온 연세대 당국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관련 기사 본지 373호 ‘저임금, 공짜 노동 강요에 맞서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연세대 당국은 한국어학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은 국내 최고 수준인데, 한국어 강사들의



정부도 대학도 한국어 강사의 법적 지위·처우 문제 나 몰라라

임금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막대한 수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학 당국들은 과거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한국어학당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때도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한 톨도 투자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하자, 강의시수를 줄여 강사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매년 한글날만 되면 ‘한글사랑’ 운운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의 법적 지위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나 몰라라 한다. 이 때문에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한국어교원 문제 이제 정부가 나서라!” 하고 요구한 것이다.

대학 한국어 강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이들의 요구대로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계약해지, 수십억 손해,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박설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사측의 거듭된 합의 번복,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

우파 언론의 계속된 왜곡·비난 속에 노동자들은 “제발 우리 요구를 제대로 좀 알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과 “폭력”, “불법” 운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말이다.

“밥 먹듯 합의를 어긴 건 SPC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해고되고 손해를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너무 일이 고되니 대기 시간 좀 줄여 달라고, 노동강도 좀 낮춰 달라고 하는 건데, 돌아온 건 노조 탄압이었어요.”

SPC그룹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매출이 늘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3퍼센트 증가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지난 10년간 매장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렸다. 그런데도 운임은 10년간 동결됐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자, SPC 사측은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더니 합의를 번복하고 탄압에 나섰다. 뻔뻔하게 사측은 최근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려고 투입한 대체 차량·기사 운영 비용까지 모두 노동자들더러 책임지라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압박하고 있다. 한 달여간 파업으로 인한 추정 손실금이 80억 원이라며 “화물연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10일이 운임(임금)을 받는 날인데, 한 톨도



9월 30일 화물연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못 받았어요. 파업 전에 일한 운임도 안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먹고살라는 건지. 역장이 무너집니다.”

분통

노동자들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한복판에서 대체수송을 막아서며 격렬하게 투쟁해 왔다. 수천 명이 동원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무더기 연행과 구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파업 대열이 대체수송 저지를 위해 세종 공장과 청주 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연대가 충분

치 않아 결국 밀려났다. 수도권 일대의 SPC 공장, 물류센터 등을 돌며 기습 팻말 시위, 홍보전 등을 이어 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우리보다 세배, 네 배나 많은 경찰 병력이 우리를 밀어내니 당할 재간이 없어요. 도대체 경찰은 누구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노동자들은 다 때려잡고,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 지키라고 있는 건가 봐요.”

다른 한 노동자는 SPC 회장에 대한 국경감사 증인 채택조차 거부한 민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선 판에서 우리 투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파업, SPC 파업 등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어야 할 상황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의당, 진보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설립 초기에 불법 파견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만큼 노동자들의 기대가 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아스팔트 위에서 밥 먹고 일할 때보다 더 힘들 게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는 역부족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완강한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 탄압에서 맞서고 있는 SPC 화물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파업으로 돌파구가 열리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0월 15일 전국 주요 거점, SCP공장, 물류센터 앞에서 SPC 자본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화물연대는 10월 20일까지 정의 찬반투표를 완료하고 곧이어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광범한 저항이 구축돼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 하루 파업만이 아니라 연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

10월 21일(목) 오후 8시

참가신청 bit.ly/meeting1021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참가 신청하기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전쟁, 정치·군사적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오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창설로 미·중 갈등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제국주의 현 국면의 특징은 무엇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제공해 온 알렉스 캘리니코스에게 들어 봅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주요 저서로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이 있다.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